

“애 키우기 좋은 동네였는데”…흉흉한 소문에 불안 확산

‘청소년 패거리’ 활개 광주 북구 신용동 학원가 가보니

학부모·주민·학생 등 “일진 무리 같아 혼자 다니기 무서워”
변화가서도 잇단 목격담…경찰·교육청 ‘지각 대응’ 논란

“애들 키우기에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사왔는데, 요새 흉흉한 소문이 도니가 무서워서 애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까 걱정돼요.”

3일 오전 10시께 청소년 패거리가 돌아다닌다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 최근 중학생 강도상해 사건이 일어났던 한 카페 인근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곳 일대는 행정복지센터와 근린공원, 큰 대로변에 학교 4곳이 있는데다 학원, 카페 등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변화가다. 범죄 위험이 큰 동네는 아니지만 최근 무인점포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행청소년 무리들이 다수 오가면서 ‘청소년 패거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신용동 일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 일대가 ‘요주의 지역’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동 학생인 A군은 “예전부터 고등학생 형들이 학대를 당하는 소문이 들었다. 선생님들도 수차례 조심하라고 일렀다”며 “막상 그 무리를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빛고을과 B군은 “학교가 끝난 후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무리들이 공원이나 카페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걸 봤다”며 “소위 ‘일진’들 같아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불안하기는 때마침이다. 신용동에서 10여년 산 주민 40대 C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무섭다”며 “사실 다른 동네 사는 아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D씨는 “이번주에

버스 경찰차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폰 빼고 폭행이 있었다고 손님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학생들이라 학부모로서 너무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또 주민들은 과거부터 청소년 무리가 다닌다는 걸 듣고도 해코지를 당할까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곳 일대 빌딩에서 6개월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은 “예전부터 중고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고 건물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 정말 미칠 노릇인데, 요즘 애들이 무서운 힘으로 겁드릴 수도 없다”며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불고자 경찰차가 와있더니 밤 9시 퇴근할 때까지 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상황이 이런데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은 효과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에 결국 강도상해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곳 일대에 우범지역이나 여성 안심 귀갓길 등 관리구역을 지정한 바는 없다. 다만 매일 2~3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신용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와 자율방범대도 매주 1회씩 방범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는 신용동 일대가 치안 취약지라고 판단하고 주민자치회와 협조해 신용동 일대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순찰 도중 ‘청소년이 다수 모여있어 무섭다’는 신고도 종종 접수돼 귀가·해산 조치도 다수 했다고 한다.



3일 오후 4시께 기동순찰대가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뒤늦게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2지구 근린공원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광주 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신용동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한 적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시 지역 안전요원 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캠페인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국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안 두고 공식 입장 논의

8일 법관대표회의…“성급한 제도 변경 우려” 행정처에 추가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외국적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선 앞두고 광주서 금품 기부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4월 ‘해뜨는 식당’에 150만원 전달

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기부행위를 한 뒤 보름 만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유재연 기자 yjyou@kwangju.co.kr

은 5~9도를 보이고, 5일은 영하3~3도, 낮 최고기온은 6~9도가 예상된다.

6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행길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

내장산 우화정

